



그리스의 회원국 탈퇴 및 유로화 회의론 대두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그리스는 EU와 IMF 등이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안을 입법화함으로써 2010년 약속받은 구제금융 중 5차분을 받게 되었고 임박한 디폴트 위기를 벗어남.

- 그리스 의회는 긴축안과 민영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, 반대 138표, 기권 5표 등으로 승인함.
- 중기재정계획은 지출축소와 세수확대를 통해 2015년까지 총 280억 유로(GDP 대비 12%)를 확보하는 방안과 국유자산 민영화 및 매각으로 300억 유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함.

■ 그러나 긴축안과 국유자산 매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그리스 위기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의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임.

- 그리스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지금까지처럼 비대하게 커진 것은 부패한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함.
- 주요 언론들은 향후 그리스 총선에서 재정계획을 입안한 현 내각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, 이로 인해 그리스 위기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예상함.

■ 그리스 부채위기가 구제금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커짐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유로회원국에서 탈퇴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 대두됨.

- 그리스의 유로회원국 탈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으나, 경제를 회복시켜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.
 - 헤지펀드 매니저인 조지 소로스는 그리스발 유럽 위기가 사실상 유로화의 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화 사용 국가 가운데 경제가 취약한 국가는 유로회원국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.

-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간 경제격차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경쟁력 격차를 조정할 수 없다며 유로체제는 결국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기함.
- 하버드대 펠트스타 교수 및 EU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독일과 똑같은 유로화를 사용해서는 경제회생이 요원하며, 유로화를 버리고 자국통화 채택을 통한 통화가치 절하로 수출 및 임금 경쟁력을 회복시켜야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함.
 - 유로화는 경쟁력이 약한 국가의 임금을 크게 높여 유로회원국간 경쟁력 격차확대 심화를 야기함.
 - Financial Times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독일의 단위 노동비용은 6% 상승했고, 유로회원국의 평균 노동비용은 25~30% 상승했으나, 그리스의 단위 노동비용은 50% 급등했다고 밝힘.
- 또한 1997~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된 것은 자국 통화가치를 신속히 절하시켜 가격경쟁력을 얻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됨.

■ 실제로 유로화 사용에 대한 불신은 유로화 사용 이후 사실상 통화절하 효과를 누리며 가장 큰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에서조차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.

-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신문이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, 독일인들의 71%가 더 이상 유로화를 믿지 않는다고 밝힘.
 - 이는 지난 4월 조사 때의 66%보다 높아진 것이며,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로화를 불신한다는 대답이 50%에 미달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임.
- 독일의 스피겔 신문은 현재 유로화체제가 경쟁력이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 모두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 및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유로화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함.

(Spiegel 6/25, Financial Times 6/27, Wall Street Journal 등 6/29)